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장기계획 비교연구*

이 용 교**

- I. 서 론
- II. 본 연구의 분석틀
- III. 수립과정
- IV. 수립 참여자
- V. 주요내용
- VI. 한·일 청소년계획의 비교
- VII. 결 론

I. 서 론

한국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0년대 초부터 증가되기 시작되었다.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던 1960년대의 청소년문제는 비행청소년을 예방하거나 보호·선도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요보호아동을 사회가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졌다. 지난 30여년동안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는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를 크게 변화시켜서 청소년 정책은 일부 비행청소년과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선도과 보호대책에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육성정책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정책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정책으로 정립된 후에 최근까지 한국 청소년정책은 두차례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4년)에서 시작되어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체육부 청소년국이 설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이다. 다른 하나는 체육청소년부에 청소년정책조정실이 설치되고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세워지며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정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다른 사회정책에 비교할 때 빈약하고, 또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문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집행되었는 지, 한국 청소년정책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

* 이 논문은 1994년도 연구과제인 「청소년육성 관련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을 요약한 것임.

**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는 매우 절실하다.

이 연구는 1980년대중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성격을 연구하고 이를 일본의 청소년정책과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1991년)과 일본의 '21세기를 향한 청소년의 전진육성 방안'(이하 '21세기방안'이라 한다, 1986년) 및 '종합적 청소년대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 1989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비교의 대상국가로 일본을 택한 이유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역사적으로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청소년정책의 국제화와 지방화에서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의 시기를 위와 같이 정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 시기는 한국 청소년정책의 격변기이기에 비슷한 기간동안의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기본계획은 2000년을 향한 10개년계획이고,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도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장기계획을 제언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계획의 수립과정, 주요내용 등을 비교연구하여 두 나라 청소년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접조사에서 자료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관계 문헌에 대한 연구와 정책형성에 참여한 주요 참여자에 대한 면접조사로 일차적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II. 본 연구의 분석틀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청소년정책'이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족, 시장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정치적인 용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Frost and Stein, 1989 : 1~9). 청소년정책이 요청되는 일차적 사회적 요인은 '사회적 이슈'로서 청소년 문제이다. 청소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소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문제'를 '청소년비행'과 동일시 하기도 한다. 청소년문제를 비행에 국한시키는 것은 청소년문제가 성인 또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도종수, 1992 : 4). 청소년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각은 청소년정책의 요인을 가족과 사회의 변동에서 찾고 있다. 최근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서 처한 여건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러한 가족과 사회의 변동 자체가 청소년문제를 야기한다고 본다.

최근의 청소년정책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표되는 현대산업사회 자체에서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을 찾고 있다. 산업화는 청소년이 전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황폐화 시킨다. 이러한 변화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성인남성보다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이 된다. 도시화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전통사회가 간직한 지역공동체의 일차적 사회 혹은 공동사회를 해체시킨다.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공간이 상업화되면서, 이윤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유해환경이 만연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유해환경의 통제 는 청소년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나

아가서 정보화, 국제화, 고령화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에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도 청소년정책이 요청된다(總務廳靑少年對策本部, 1989 : 55~67).

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자의 성분, 수와 역할은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대체로 다원주의론은 정책형성과정에 여러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활발히 참여한다고 보고, 엘리트론은 소수 엘리트가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정책형성은 정치체제의 핵심적인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산출된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또한 당연한 것이다(정정길, 1990 : 138~139). 그러나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정부의 담당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과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관료가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식적인 정책형성자 또는 참여자들은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보잘 것이 없었고, 한국의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에까지 권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형성의 공식적인 참여자 이외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전문가와 학자, 언론기관 등이다(유훈, 1989 : 134~167).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정책형성과정의 설명이론으로 엘리트론이 보다 더 적절했다는 선행연구(손준규, 1983; 정정길, 1990; 현외성, 1994)를 감안하여 엘리트 중에서 어떤 엘리트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수립과정

1. 기본계획

한국의 기본계획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1년 5개월동안 준비하여 작성된 청소년육성10개년계획이다(공보처, 1992 : 521~526).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월 31일 체육부 업무보고시 김집 체육부장관에게 청소년 전전육성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이므로 8년간의 준비로 1988년에 세계적인 올림픽을 개최한 것과 같이 청소년문제도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전전육성 정책을 펴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청소년육성10개년계획 수립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체육부는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위원회'를 1990년 6월 25일에 구성하고, 9월 28일에 기획팀을 구성하였다. 11월 30일에는 10개년계획위원회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위원회'로 개칭하였다. 기본계획위원회는 1차시안을 작성하고, 여론을 수렴한 후 2차시안을 작성하여 1991년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관계장관 합동보고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기본계획 기획팀이 보완작업을 하여 기본계획위원회와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1991년 6월 27일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2.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

일본의 21세기방안은 청소년문제심의회가 내각총리대신에게 정책건의한 것이다. 이 정책건의서는 심의회의 제9기 위원들이 1983년 7월 20일에 심의 주제를 '21세기를 향한 청소년의 전전육성

방안'으로 정하고 '전전육성부회'를 설치하여 중간보고서로 '현대청소년의 실상에의 접근'을 완성하였다. 이를 제10기 위원이 이어받아서 1986년 12월 4일에는 '21세기를 향한 청소년의 전전육성방안'을 결정하여 내각총무대신에게 정책건의하였다.

종합대책은 청소년문제심의회가 1989년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정책건의한 것이다. 이 정책건의서는 제11기 청소년문제심의회가 '종합적 청소년행정추진부회'의 설치를 결정하고 약 1년간 연구한 것이다.

IV. 수립 참여자

1. 기본계획

한국의 기본계획은 체육부의 주도에 의해서 구상되고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계획의 수립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체육부 김사홍 청소년국장과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윤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위원회'를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직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전문위원, 청소년정책조정실 합동으로 '기획팀'을 구성하였다.

기본계획의 시안작성은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연구직원과 체육부 청소년국(후에 청소년정책조정실)의 관련 공무원에서 의해서 기초 자료가 준비되면, 이를 기획팀이 취합하는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기획팀은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여 각 연구팀에게 세부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기획팀이 정리한 초안은 형식상 기본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안이 되고 시안에 대한 행정부서,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가 등의 여

론을 수렴하였다. 따라서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체육청소년부의 담당공무원과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연구직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되고, 다른 행정부서와 청소년단체의 의견은 선별적으로 반영되었다. 비록 기본계획위원회에는 행정부의 청소년정책담당자(주로 과장급)가 1/3정도,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연구직원이 1/3정도, 기타 청소년단체의 대표와 청소년전문가가 1/3정도 참여하였지만, 계획안의 작성은 기획팀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이다.

2.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의 수립 참여자는 청소년문제심의회 위원이다. 청소년문제심의회는 주제를 정해서 연구팀('부회')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를 정책건의하였다. 21세기방안은 제9기 위원의 연구팀이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10기 위원의 연구팀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청소년문제심의회 제9기 위원은 20명중 9명이 전전육성부회의 위원이고, 제10기 위원은 19명중 8명이 연구팀이었다. 그동안 청소년문제심의회 의장은 바뀌었지만, 전전육성부회의 部長은 坂本昇一(千葉大學教授)이 맡았다(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編, 1989 : 80~81).

종합대책은 제11기 위원의 연구팀이 1여년동안 연구해서 작성하였다. 심의회 위원 19명중 11명이 종합적 청소년행정추진부회의 위원이고, 부회장은 吉里邦夫(日本女子社會教育會理事長)가 맡았다(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編, 1989 : 33). 심의회 의장과 부회장은 세 경우 모두 部會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연구에 깊이 관여하였다.

청소년문제심의회 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의 소속과 직위는 대학교수(명예교수 포함)가 부회장

을 포함하여 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청소년 단체의 대표(3명), 주식회사의 대표(2명), 고등학교장(1명), 변호사, 평론가, 발레교실 주임지도원(각 1명) 등 다양한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의 청소년 장기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안되고, 이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됨을 알 수 있다.

V. 주요내용

1. 기본계획

1) 구성

기본계획은 1차·2차시안이 ‘수련활동계획서’같다 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용보다는 형식을 바꾸었는데, 총괄,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교류, 법제보강, 재정확충·운영, 기대효과 등 모두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체육청소년부 b, 1991: 1~4).

기본계획의 총괄편은 기본방향, 목표, 기본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1,360여만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련활동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조장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기본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본계획은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우리의 청소년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갖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청소년상을 세우고 청소년의 자발·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 보다 나은 기회가 부여되는 청소년 성장 요람 조성, 선진·민주·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중점목표로 하였다. 총괄편은 기본계획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부는 이 계획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영역에서 ‘수련활동’을 발굴하여 “수련영역의 책임소재 및 업무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청소년활동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은 수련거리의 개발과 보급, 수련터전의 확보,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을 핵심으로 한다.

수련거리의 개발은 청소년들의 창의적 개인성 개발을 위한 건강·정서·용기 및 상호적 사회성 개발을 위한 예절·협동·금지 등 6대 수련지표에 따라 체력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 복합수련 등 7개 활동영역별로 300종의 기본형 수련거리를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의 대상별·성별·연령별 및 적용될 시기와 장소등의 특성에 따라 응용 시행한다고 했다.

이러한 수련거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련터전(장소·시설·설비)의 유형과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하여 행정구역, 청소년분포, 자연경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수련터전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과 대자연 속에 위치한 자연권으로 나뉘었다. 기본계획이 청소년수련활동을 강조한 계획이라면,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청소년수련터전의 확보로 요약된다. 기본계획은 생활권 수련터전(1만 2,909개)

및 자연권 수련터전(608개)에 필요한 총 1만 3,517개 시설중에 4,494개소는 기존의 청소년전용 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공공회관, 농어촌 폐분교 등을 활용하여 충당하며 나머지 9,023개소는 신규로 확보할 예정인데, 향후 10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권장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지도자는 전문 양성과정 및 임용·배치기준이 없는 가운데 청소년단체가 주로 현직교사, 직장인,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실정으로 전문성과 시간이 부족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제, 임용의무화, 교육훈련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지도자의 명칭은 논란이 많은 '수사' 대신에 청소년지도자로 하고, 지도자의 종류를 크게 전문지도자(1급, 2급)와 자원지도자로 나누었다. 또한 지도자의 임용의무화를 자격취득자의 우선배치로 완화시켰다. 그런데 10년동안에 전문지도자 20,000명과 자원지도자 100,000명, 현직지도자 17,000명 등 총 137,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약한 것이었다. 지도자양성에 필요한 소요예산 3,071억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금액 조차 강사료와 교재비이고 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는 인건비는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년단체의 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협)에 가입되어 있는 31개 단체와 기타 비가입단체를 포함하여 50여개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들은 재정적 영세성과 전문지도자 부족 등으로 단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기본적·초보적 활동에 머무르고 있으며, 활동의 내용도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따라서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수행됨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었다. 최종안은 청소년단체의 유형을 청소년단체(회원중심), 수련터전운영법인(터전중심), 수련거리 전문운영단(거리중심), 청소년 자생모임(동아리 씨름)등 4가지로 나누고, 각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립하였다. 연차별 전문단체의 설립·지원은 10년간 회원중심청소년단체 200개, 수련활동시설법인 1,389개이다.

기본계획은 수련활동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국가시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다양한 동기부여책을 통해서 청소년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했다. 최종안은 한국청소년수련원과 시·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활동기록부를 관리하여 정책의 자료로 삼고 대학이 신입생을 전형하거나 기업체가 신입사원을 전형할 때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기로 했다. 대입 전형에 수련활동실적을 반영하는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지만, 내신성적의 25%를 수련활동으로 평가한다는 2차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3)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가 청소년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기본계획에서는 매우 소홀히 취급되었다. 기본계획에서는 사회환경의 개선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합하여 '청소년복지'란 독립편을 구성했다. 시안에서 논란이 많았던 유해환경의 정비는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민간단체활동의 지원, 대중매체의 자율규제기능강화 등과 같이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의 감시와 규제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육성제' 등의 신설은 제외되었다.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은 수련활동지원, 교육·직업훈련지원, 비행예방·관리 등 주로 체육청소년부가 할 수 있는 사업만을 다루고 다른 행정부처에서 하는 청소년복지는 대부분 누락되었다.

4) 청소년교류

기본계획은 국제교류, 남북한청소년동질성회복에 세계한민족체전 청소년행사를 추가하여 ‘청소년교류’ 편을 구성하였다. 국제교류는 국제간 협력증진, 국제간 이해 및 우의증진, 국제감각 고양, 해외탐방선으로 재편성하고, 남북한청소년동질성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남북한 청소년어울마당, 통일기원 청소년대행진, 학습여행단 상호방문 등을 예시하였다. 그런데, 청소년교류사업은 실현가능성이 대단히 불투명한 계획들이 많았다. 국제교류의 인원을 10년간 26,134명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회복을 위한 사업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 법제 보장

기본계획은 청소년 배려제도 보장, 수련활동 중추기구 설치, 청소년기본법 제정, 청소년관계법령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제보강’을 한 편으로 다루고 청소년기본법의 시안을 제시하였다. 기본법 시안은 청소년활동의 영역에서 ‘수련영역’의 설정과 지원체계, 청소년을 위한 대통령위원회의 설치, 청소년활동을 위한 민간중추기구의 설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포함하였다.

6) 재원조달

기본계획은 소요예산을 2조 4,836억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고(7,785억원), 지방비(4,312억원), 기금(714억원), 민자(1조 2,025억원)로 조달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육성세는 삭제되고 청소년공공예산의 획기적 증대, 청소년기금의 확대, 청소년활동사업 주체의 다양화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지만, 청소년 재정의 문제점인 국고의

빈약, 지방청소년재정의 영세성, 청소년기금확충방안의 불투명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2. 21세기방안

1) 구성

21세기방안은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 등이 예상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청소년이 적극적인 역할을 짊어질 필요가 있고,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건전육성의 과제와 행정의 대응방책을 제시한 것이다. 21세기방안의 구성은 청소년의 현상과 의식을 개관하는 현대청소년의 실상(제1장),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의 가운데에 있는 청소년의 역할과 청소년 건전육성의 과제에 관해서 진술하는 21세기를 향한 사회와 청소년(제2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육성의 과제와 행정의 대응방안을 진술하는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방안(제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현대청소년의 실상

현대 일본의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자라서 풍요사회를 향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진학, 취학 등의 사회적 측면의 상황과 신체, 영양 섭취 등 개인적 측면에서도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그러나 소년비행은 전후 제3의 피크라고 불리울 정도로 높고,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가정과 지역의 변화 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청소년의 의식은 개인지향적이고 사회적 관심이 희박해지고 지금까지 일본의 특징이었던 직장과의 일체감도 변화되고 있다(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編,

1989 : 45~79).

3) 21세기를 향한 사회와 청소년

이 정책건의서는 현대 청소년의 실상을 알리고, 21세기를 전망하면서 시대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제안한다. 청소년 전전육성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의 변화를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의 진전으로 보고 이 세가지 측면에서 청소년육성상의 과제를 제안한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청소년의 역할은 한층 중요할 것이다. 그 가운데 청소년 육성상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①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에서의 활동 등 각종 사회참가활동에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기회를 증가시켜, 청소년의 가슴에 사회적 연대의식을 키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실태에 맞는 창의력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직장에서는 사회참가를 위한 휴가제도 등 기본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참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청소년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제공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자발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에서 한층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활동의 참가를 통해서 청소년의 자율성과 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 청소년활동지도자의 양성과 청소년시설의 충실, 청소년단체에 원조 등을 할 필요가 있다.

③ 핵가족화등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가정의 교육기능을 보강하고, 세대간의 연대감을 키우기 위하여 지역에서 세대를 초월한 사람들간의 교제를 깊이하고, 의사전달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의 제활동에 지도교사 등의 형식으로 지역의 문

화, 예술, 기능 등 보유자, 퇴직한 직장생활의 경험자등을 참가시켜, 지역의 행사가운데 청소년단체와 노인단체의 교류를 꾀하는 등 지역 세대간의 의사전달의 촉진을 힘쓴다.

④ 직장에서는 근로청소년의 노동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제도, 근무시간, 휴가제도 등을 고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를 원조하며 건전한 여가생활의 충실 등 직장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⑤ 청소년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예컨대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등 지역에 있는 조직에 청소년의 영입추진, 지역활동의 장이나 기회의 확보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의 진전 가운데 청소년의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 적응능력이 특히 기대되고, 다음과 같은 과제에 유의하여 청소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① 청소년의 풍부한 창조성과 정서를 키우기 위하여, 자연관찰과 자연속에서 활동 등 학교 안 밖에서 다양한 학습활동 등을 많은 학생들에게 주어서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높이는 기회를 키울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관계시설에서 정보기구를 취급하거나 그것의 이용을 위한 강좌와 연수 등을 열어서, 정보기술에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과학기술이 청소년에게 가까운 것이 되도록 보급하고 일반화를 꾀한다.

③ 정보유통의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공급측의 자제를 촉구하는 국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보호자와 청소년육성단체 등도 힘을 합하여 사회전체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그것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앞으로 한층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가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생애학습으로서 청소년이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사업과 근로청소년복지사업의 지도자의 양성, 청소년의 욕구에 맞은 시설의 충실,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체계를 정비한다.

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기구와의 접촉이 증가하고, 실제체험이 결여되어 인간성의 상실, 따뜻한 분위기의 결여, 체력의 저하 등이 생기므로, 집단숙박생활과 공동체험학습, 자연의 관찰 등을 통하여 정보로 알고 있지만 체험하지 않은 자연, 동물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깊이하며, 또한 야외레크리에이션등을 통하여 건강·체력단련 운동을 촉진시킨다.

⑥ 청소년의 균형있는 인간형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는 예술과 철학 등의 정서·정신 측면에서의 육성의 충실을 꾀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 사회에서 일본의 국제화를 한층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에 유의하여 청소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① 청소년국제교류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국제적인 연대감과 협조정신을 고양시킨다. 이 경우에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의 충실 등 청소년국제교류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진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국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단체에서 행하여온 집단수준의 조직적인 청소년국제교류와 함께 ‘근무휴가제’의 활용과 ‘민박’ 등에 의한 개인수준의 국제교류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류사업에서 프로그램 등 그 내용의 검토를 한층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을 청년해외협력대 등 국제협력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시켜서 청소년의식의 국제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활동 중의 사고보험과 직장복귀의 원만 등의 환경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서 국제협

력의 지원활동과 국제이해의 보급활동을 시작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③ 다른 문화의 이해와 국제이해를 키우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외국어와 외국문화의 학습 기회를 다양하게 준다. 이 경우 지금까지 하여온 구미지역의 학습 이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학습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④ 올바른 국제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통문화의 진흥과 보급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자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방안

청소년의 건전육성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 방안의 제시가 요청된다. 21세기의 사회는 도시화의 진전, 가족의 변화, 고령화, 정보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보호, 세대간 교류, 지역만들기 등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청소년이 지역의 제반 활동에 참가하여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육성의 과제는 청소년의 학습·사회참가촉진을 위한 기반적 조건의 정비와 비행등 문제행동의 방지가 핵심이다. 청소년의 학습·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활동장소의 확보, 지도자의 양성과 확보, 정보수집·제공과 상담기능의 충실, 모델사업 등의 추진, 단체활동의 촉진, 안전의 확보 등의 기반 조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차원에서 행정을 재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 청소년문제협의회가 지역사회에 맞는 청소년 건전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청소년육성도도부현민회의와 청소년육성시정촌민회의가 청소년 건전육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수준에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 시설들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3. 종합대책

1) 구성

종합대책은 일본의 청소년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소년비행, 도피적 문제행동 등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 성청의 시책의 추진·제휴체제의 정비 등 종합적인 조치의 강화를 건의하였다. 종합대책의 내용은 머리말, 문제의 소재와 검토의 시점, 청소년행정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등, 청소년관계시설의 이후 방안, 청소년상담의 충실·강화,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 조사·연구와 정보수집·제공기능의 충실 등 6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종합대책은 21세기를 향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 마음깊은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한 실천적 사회성, 자율정신, 상호이해에 기초한 국제 연대감과 협조정신을 체득하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이 정책제안서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상호간에 연대, 제휴,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종합적 청소년행정의 추진 방안

행정에서 청소년대책의 종합적인 조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종합적 시책의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행정 상호간의 연락, 조정, 정보교환, 제휴, 협력을 강화, 충실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청소년행정에 대한 기본적·종합적인 시책의 수

립과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에 관계 성청의 협력하에 현재의 '비행대책의 추진에 대하여'의 대신에 비행대책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청소년대책추진요강'을 만들어서 이를 추진한다.

청소년대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제휴를 꾀하는 체제로서 현재 관계성청의 담당 국장수준의 '비행방지대책추진연락회의' 이외에 과장수준의 연락회의(청소년대책관계성청연락주관과장회의, 비행대책관계성청연락회의, 청소년상담기관관계성청연락회의, 청소년사회참가관계성청연락회의)가 있는데, 이후에는 청소년에 관한 시책전반이 각 성청연락하에 한층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제휴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비행방지대책추진연락회의'를 '청소년대책추진연락회의'로 개조하고 다른 연락회의를 포함하여 현 체제의 방안을 바로 잡는다. 그 방법으로 청소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각 성청간의 제휴확보에 배려한다.

아울러 지방공공단체는 청소년문제협의회가 청소년문제를 조사·심의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도도부현청, 교육위원회, 경찰본부 등의 청소년담당부서는 도도부현 청소년종합대책본부로서 정비하고, 앞으로 내부의 제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간의 제휴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요망된다.

VI. 한·일 청소년계획의 비교

1. 수립과정

한일 청소년장기계획은 수립과정에서 큰 차이

가 있다. 한국의 기본계획은 대통령이 청소년담당 행정부서인 체육(청소년)부에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 체육(청소년)부가 청소년전문가를 동원하여 기본계획의 안을 만들고 이를 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완성시켰다. 그런데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내각 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인 청소년문제심의회에서 주제를 결정하고 이를 자체연구팀이 연구를 해서 내각총무대신에게 정책건의 형식으로 제출하면, 이것이 대체로 정부의 청소년정책으로 채택된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위원회란 비상설기관이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행정부서와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안을 작성하고, 청소년정책의 심의기관인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된 정부의 청소년정책계획서라면,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청소년문제심의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되어 정부에 제출된 청소년정책건의서란 차이가 있다.

2. 수립참여자

기본계획은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의 일부 직원과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연구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획팀’이 기본계획의 골격과 세부내용을 총체적으로 설계하였다. 여러 차례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지만, 다른 행정부처, 청소년단체 그리고 여론의 강한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시안이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내각 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인 청소년문제심의회가 주제를 정해서 자체 연구하여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일본의 청소년장기계획은 오랫동안 청소년문제심의회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심의회의 기수가 바뀌어도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내용

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의 범위를 정하고 주무부서로서 체육청소년부의 역할을 확장하는데 있었다. 청소년정책은 기능별로 나누어진 다양한 정부부처가 소관업무와 함께 관련된 청소년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체육청소년부가 고유업무로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기본계획은 체육청소년부의 고유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체육청소년부는 고유업무로서 청소년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과 ‘육성’이 함께 필요하다는 논리로 기본계획을 설계했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지식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체육과 덕육을 중심으로 한 ‘육성정책’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체육청소년부의 시각은 교육의 이상은 지·덕·체육을 통한 전인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과 별도로 육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교육부의 시각과 갈등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만을 체육청소년부가 담당하길 기대하고, 체육청소년부가 ‘수련활동’을 통해서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다. 기본계획이 초안에서 최종안으로 수정되는 과정은 청소년업무에 대한 체육청소년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와 기존의 영향력을 보존하려는 관련 부처의 ‘싸움’이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강화와 민간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힘겨루기로 인식된다.

체육청소년부는 제2의 서울올림픽과 같은 거대

한 청소년육성계획을 세우려고 하였지만, 다른 행정부처와의 현실적인 역학관계 내에서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핵심이 되는 청소년수련터전의 확보, 수련거리의 개발,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방

대한 계획을 담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을 기정 사실화하였다. 다만 기본계획이 다소 무리한 계획이고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정치적 변동과 예산의 빈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현재의 청소년

한국의 기본계획과 일본의 21세기방안·종합대책의 비교

	한국의 기본계획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
명칭	한국청소년기본계획	•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건전육성 방안 • 종합적 청소년대책의 실현을 목표로
발표연도	1991년	1986년, 1989년
성격	청소년10개년계획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책건의서
수립제기	대통령이 체육부에 지시	청소년문제심의회의가 의결
작업반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과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문제심의회의의 건전육성부회와 종합적 청소년행정추진부회
총괄기구	한국청소년기본계획위원회 — 한시적인 체육청소년부의 자문위원회	청소년문제심의회의 — 내각 총리대신의 법정 자문기구
수립참여자	체육청소년부, 한국청소년연구원, 관련 행정부, 청소년전문가	대학교수,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가, 기업인, 각계의 대표
정책확정	청소년육성위원회	내각
핵심내용	청소년활동 장려	청소년의 삶의 질의 향상
주요사업	청소년활동의 제도화 청소년복지와 교류증진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육성, 비사회성문제에 대응
교육과관계	육성을 교육과 별개로 인식	교육을 청소년대책의 핵심사안으로 인식
정책변화	청소년기본법 제정 시도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 수립	청소년대책추진회의의 구성 도도부현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년문제와 미래사회에 예견되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청소년대책은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 사회를 짚어질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부서의 청소년업무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의 종합대책은 청소년 관련 성향이 각기 고유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성

청과 연대/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21세기 방안과 종합대책은 청소년정책이 도도부현과 시정촌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였다.

종합대책은 현재의 '비행방지대책추진연락회의'를 '청소년대책추진연락회의'로 개조하고 다른 연락회의를 포함하여 청소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각 성청간의 제휴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간의 제휴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요망된다는 청소년문제심의회의 정책건의는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해서 '청소년대책추진요강'을 개정하였다(總務廳靑少年對策本部, 1990).

VII. 결 론

이 연구는 한국의 기본계획과 일본의 21세기방안 및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청소년 장기계획의 수립과정, 수립참여자, 그리고 주요내용을 비교연구하였다. 양국의 청소년장기계획의 성격을 보면, 한국의 기본계획은 행정부가 주도한 정책계획서이고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청소년문제심의회의 정책건의서이다. 따라서, 계획수립의 참여자는 기본계획은 체육청소년부의 행정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원이 핵심이고,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나 청소년단체의 대표 등은 주변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른 행정부처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내용에 대한 기득권 보호의 차원에서 정책수립에 관여하였다.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대학교수, 청소년단체의 대표, 기업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계획수립에 참여하였고, 그 정책제안은 대부분 청소년정책으로 반영되었다.

한국의 기본계획은 청소년복지와 교류도 강조되었지만,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 수련거리, 단체, 지도자 육성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보강과 재정확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민간

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책을 제안하지 못하였다.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21세기를 준비하면서도 현재 증가되고 있는 비사회성문제를 포함한 광범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청소년정책의 개발과,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각 성청간의 연대와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단체)의 제휴,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한일 청소년 장기계획을 비교연구하면서, 한국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본의 청소년대책본부는 산하에 국장수준으로 구성된 청소년대책추진회의가 있고, 과장수준으로 구성된 5개의 관계성청연락회의가 있어서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육성실무위원회(국장급)는 연간 한두차례의 의례적인 회의에 그치고,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과 심의능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조정과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과장급의 협의조직을 설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심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본계획은 청소년담당행정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원이 시안을 작성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주변인이었다. 앞으로 청소년정책의 수립에는 청소년전문가, 청소년단체, 기업인, 법률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의례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실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실무자로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정책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정책은 주무부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강조점이 변화되었다. 이제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단지 청소년이란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회여건을 고치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은 체육청소년부가 수련활동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장기계획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의 건강, 국제화·정보화·지방화

사회에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정책은 지방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정책은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 등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청소년의 생활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시·군·구의 수준에서 청소년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실천하며,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청소년육성국민회의, 도도부현민회의, 시정촌민회의와 같은 청소년을 위한 국민운동을 조직화해야 한다. 이 조직에는 청협의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보처. 1992. 「제6공화국 실록 ; 노태우 대통령 정부 5년」 제4권.
- 김영모 외. 1988.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체육부.
- 손준규. 1983. 「사회보장·사회개발론」, 집문당.
- 이용교. 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출판부.
- 이용교. 1991.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새동경도 행동계획”, 東京都, 「青少年 健全育成のための 新東京都 行動計画—青少年の豊かな 生活空間をめぎに—」.
- 이용교. 1994. 「한국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구 외. 1990.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정정길. 199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1990. 「한국청소년기본계획(안)」.
- 체육청소년부. 1991 a.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발표자료—」.
- 체육청소년부. 1991 b. 「한국청소년기본계획」.
- 체육청소년부. 1991 c.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참고자료」.
- 체육청소년부. 1991 d.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안)(총괄편)」.
- 체육청소년부. 1991 e. 「청소년백서」.
- 체육청소년부. 1992. 「청소년기본법 제정 관련 설명자료」.
- 체육청소년부. 1992. 「체육청소년 10년사」.
- 체육청소년부. 1992.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3년도 시행계획」.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토론회」.
-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1992. 「제1차 청소년정책 토론회-21세기를 살아갈 오늘의 청소년 : 과제 및 정책-」.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일본중앙청소년단체연합회. 1988. 「21세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
- 함병수 외. 1991.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성체계·법령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원.
- 현외성. 1994.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유풍출판사.
- 東京都. 1991. 「青少年 健全育成のための 新東京都 行動計劃-青少年の 豊かさしこ 生活空間 をめざして-」.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編. 1987. 「青少年白書-青少年問題の 現況と 對策-」.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編. 1989. 「青少年の 健全育成をすざしこ- 青少年問題審議會 10年の 歩み-」.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編. 1990. 「青少年白書-青少年問題の 現況と 對策-」.
- Frost, Nick and Stein, Mike. 1989. *The Politics of Child Welfare-Inequality, Power and Change*, New York : Harvester Wheat-sheaf.
- Graycar, Adam and Jamrozik, Adam. 1989. *How Australians Live-Social Policy in Theory and Practice*, Artarmon : Macmillan Compony of Australia Pty Ltd.
- Jeffs, Tony and Smith, Mark(ed.). 1988. *Welfare and Youth Work Practice*, London : Macmillan Education Ltd.
- Jeffs, Tony and Smith, Mark(ed.). 1990. *Young People, Inequality, and Youth Work*, London : Macmillan Education Ltd.
- Jones, Charles O.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金海東 譯. 1986. 「政策形成論」, 法文社.
- Kadushin, Alfred and Martin, Judith A. 1988. *Child Welfare Service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White, R. D. 1990. *伊 Space of Their Own-Young people and social control in Australi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outh Affairs Council of Australia. 1983. *Creating Tomorrow Today-a Youth Policy Report based on Nationwide Consultation-*, Youth Affairs Council of Australia.